"타 지역 죄다 적자" 없었던 일로?

초기비용 50억 年 적자 10억 예상
이용 희망자 많아 '空約 시비'일 듯

■광주시 영어마을 재검토

지난 2004년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어 마을 붐이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곳의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조성이 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영어마을이 모습을 보인 지 2년여가 지나면서 '예산 먹는 하마'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들이 영어마을 조성을 포기했으며, 광주시도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적자 등을 고려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시 영어마을 포기하나**=시는 당초 상무지구에 5천여평의 부지를 확보, 파주와 같은 영국풍 형태의 영어마을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롭게 마을을 조성할 경우 최소 100억원의 건립비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기존 연수원이나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비용도 50억원 이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간 운영적자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자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건립비와 운영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영어마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시민들에게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사업 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영어마을 상황**=현재 운영중인 영어마을은 경기지역 4곳과 서울 2곳, 인천 2곳, 전북·경남 각 1곳 등 총 10곳이다. 여기에 부산과 대구, 경기 양평·이천 등 사업이 최종 확정되거나 시설공사 중인 곳이 10곳에 달하며, 계획중이거나 사업을 발표한 지자체도 15곳 정도나 된다.

이중 영어마을의 대명사인 파주의 경우는 8만4천평의 부지에 완전히 새로운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가 850억원이나 투입됐다. 나머지 9곳의 영어마을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연수원이나 폐교 등을 리모델링했다. 파주와 안산 등 2곳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매년 220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보고 있다. 다른 시설들도 10억원에서 3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타당성 논란 및 백지화 증가**=영어마을의 출발이 사교육비 절감에서 비롯됐으나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적자로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은 대부분 포기한 상태며, 광역지자체들도 의회의 반발이나 자체 검토를 통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곳이 많다.

경북의 경우는 도의회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영어마을 조성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영어마을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의 연계사업 등 별도의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광주와 전남의 인구가 총 340만명에도 못 미치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접경지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운영중인 영어마을 〈단위:억원〉

시설명	개원일	조성형태	운영	사업비
서울풍납	'04. 12	리모델링(연수원)	민간	120
서울수유	'06. 03	리모델링(스포츠센터)	〃	386
인 천	'04. 12	리모델링(전문학교)	〃	80
인천서구	'05. 09	리모델링(초교)	〃	37
경기안산	'04. 08	리모델링(연수원)	재단	85
경기파주	'06. 04	신 설(영국풍)	〃	850
성 남	'05. 12	리모델링(연수원)	민간	55
안산화정	'06. 09	리모델링(초교)	〃	30
전북전주	'05. 10	리모델링(초등학교)	재단	30
경남창녕	'05. 09	리모델링(기숙사)	교육청	4.5

전국 최대규모인 경기 파주 영어마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엑스포·광주동아시아대회 유치 협력
광주·전남북 '호남권 정책협의회' 공동발전 결의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9개 지역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제4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 광주유치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 추진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벌률 제정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3개 시·도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각종 행사시 플래카드와 홍보물 비치 및 배부,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세계 박람회 홈페이지 링크, 공무원교육원에서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 영상물 상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호남권의 SOC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오송~목포 구간 동시착공을 통한 조기개통 ▲전주~광양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시·도를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각종 스포츠 동계전지훈련 전남유치와 친환경농업 교육 자료의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광주와 전남·북의 공동발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04년 12월 발족한 뒤, 지금까지 3차례 열렸고 23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협력해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종구 서남권발전추진단장 프로필

금호그룹 故박인천 회장 5남 3녀중 막내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이끌고 갈 서남권발전추진단 단장에 내정된 박종구(48)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차관급)은 금호그룹 창업자인 고 박인천 회장의 5남 3녀중 막내.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난 박 차장은 서울 충암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경제학박사(재정경제학)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DJ 정권초기인 1998년에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2급 이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다양한 학문 연구를 통해 경제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고, 관련 실무를 통해 현장감각도 뛰어나다는 평. 따라서 서남권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통솔하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2002년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1급 관리관)에 임명됐고, 올 1월 단행된 차관급 15명에 대한 청와대 인사에서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에 임명됐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의 경주 유치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황조근정훈장을 타기도 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회고 2006 ❷ 노벨상 수상자 정상회의·민족통일축전

세계속의 '광주' '5·18' 평화·통일도시 발돋움

지난 6월 전 세계의 이목은 광주에 집중됐다. 바로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6·15민족통일대축전'이 한꺼번에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 평화의 사도들이 대거 참여한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15일~17일)'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6·15민족통일대축전(14일~17일)'은 민주·인권의 상징이었던 광주를 평화·통일의 도시로 승화시켰다.

두 행사는 지역적으로는 5·18정신의 세계화와 광주의 위상제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 협력 분위기 조성,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신장과 세계평화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역대 행사중 가장 많은 12명(단체 포함)이 참여한 것을 비롯, 국내외 인권 전문가 등 총 13개국 5천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져 광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로마에서만 열렸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타 국가 도시인 광주에서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광주'와 '5·18'은 세계 속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또한 광주정상회의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 광주에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세계 빈곤 퇴치, 비핵화 등 범세계적인 화두를 다뤘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던져줬다.

세계 평화의 사도들은 광주정상회의를 총정리한 '광주 선언'에서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한반도와 세계의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인류의 염원과 역사적 책무를 확인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더욱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같은 날, 동일한 지역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이 함께 열린 점은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민족통일대축전은 행사 첫날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항에 나와 북측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했으며, 각 부문별 행사에 5만여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등 당시 남북 긴장상태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6·15축전 북측 대표단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노벨평화상 수상자들도 5·18묘지를 참배해 '5·18'의 정신을 기린 점은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역대 최대 행사를 치른 광주는 노벨평화상 회의를 정례화하거나 5·18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문제가 됐던 특급호텔을 비롯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국제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소련 대통령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지난 6월17일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폐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